

검찰, 긴급조치 위반 145명 직권재심 청구

유신체제 비판 처벌... 재심청구 안한 피고인 420명 대검 공안부 "긴급조치 1·4호 위반사건 순차검토"

유신정권 당시 이른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약속했던 검찰의 '과거사 반성' 작업이 반경을 넓히며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9일 "청와대에 유신헌법을 철폐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 모씨(69) 등 145

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26개 검찰청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건설 노동자로 일하다 귀국한 김씨는 1978년 9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 토론 없이 제정됐으므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청와대로 보냈다가 긴급조

치 9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함께 직권재심 청구대상으로 선정된 이 모씨(당시 21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75년 6월 친구에게 "전국 기계과 체육대회가 무산된 것은 문교부 검열 때문이다"고 말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농부 김 모씨(당시 45세)도 1975년 5월 "긴급조치는 독재의 길로 가는 길이니 즉각 해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다 붙잡혔다.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칭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 헌재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996명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420명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재심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태영호 납북사건'과 '문인간첩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13건에서 유죄를 받은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박근혜 국선번호인 선정... 재판 기일지정” 법원, ‘박 재판’ 연기...최순실·신동빈은 속행

법원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번호인 선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의 종전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번호인 선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진행에 대해선 "박근혜 피고

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만큼 오늘 기일은 연기하겠다"며 "선정된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심리지역을 막기 위해 이날 안중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MB국정원, 'DJ 라프트상' 취소 청원도

노르웨이 단체에 서한...노벨상 취소공작 차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트상' 취소청원 공작에도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등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0년 3월 김 전 대통령의 라프트상 취소공작 계획을 당시 원세훈 원장 등 수뇌부에 보고했다.

심리전단은 '보안'으로 분류한 내부 보고서에서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려면 이에 앞서 받은 권위있는 인권상인 라프트상을 취소시키는 '단계적인 공작'이 필요하다고면서 자유주의진보연합 간부를 통해 노르웨이의 라프트상 시상단체에 서한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뒷돈을 주고 한 남북정상회담을 공적으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겠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은 국정원이 자유주의진보연합 간부를 통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을 취소해 달라는 정원서한을 보낸 직후다.

국정원은 지난 16일 이명박 정부 시절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노벨상 취소공작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추모열기가 형성돼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된다고 판단, 고인을 깎아내리는 심리전에 나섰다

한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앞세워 'DJ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 국립묘지 안장반대 시위에 나서게 하는 등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일련의 정치공작에 나섰다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발전, 인권신장, 남북대화를 통한 동북아 긴장완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앞서 그 해 11월에는 노르웨이의 반독재 인권운동가인 토틀프 라프트 교수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라프트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공공노총, 내란·업무상배임 혐의 MB 고발

“땃글조작 지시...자원외교 실패 수습소 피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국가기관을 동원해 땃글조작을 지시하고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로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내란죄·특경법상 업무상 배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공노총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대통령은 땃글조작을 지시해 2012년 선거에 개입하고, 자원외교 실패로 여러 자원공사에 수십조원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땃글공작에 가담토록 지시하면서 정권유지와 정권 재창출에 국가기관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추진한 자원외교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10년간 13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고 무역보험공사는 무리하게 보증을 썼다가 출연금 2억4,350만달러를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시 미금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국민편익 위해 수사권 조정돼야”

경찰개혁위, 대국민 중간보고회...“경찰권 정치적 독립”

경찰개혁에 참여하는 민간 인사들이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금동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어 경찰개혁 의미와 방향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우리 수사체제는 특정기관의 권력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고, 국민 인권과 권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극복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구조개혁은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헌법적 가치 실현, 경찰권 정치적 독립 등 9개 항으로 이뤄진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경찰권 행사의 모든 과정 헌법적 가치 실현 ▲경찰권 법률근거 행사 ▲경찰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국민참여와 통제 기반 등의 내용

을 담았다. 조직 내 성평등 제고, 인권경찰 제도화 방안,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 등 5건의 신규 권고안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경찰관을 채용할 때 남녀 분리모집 현행제도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2020년부터 성별 구분없이 통합 모집하고, 경찰대·간부후보생 채용에서 이를 우선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경찰대·간부후보생에 한해 남녀 통합모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혁위는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도입, 가능별 여성선발 목표치 설정, 승진심사위원회 등에 여성경찰 참여의무화 등 성별 불균형 해소방안도 제안했다.

법령·훈령·예규와 주요 정책이 인권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판단하는 '인권영향평가제' 도입도 제시했다.

피의자나 참고인, 피해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내용을 기록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기록하는 행위 역시 보장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경찰관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개혁위는 기관장이 4급(총경) 이상인 경찰관서에 일선 경찰관과 관서장간 의사소통기구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설립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경찰청은 "권고안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고, 권고안 수용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 남녀 통합모집은 방향성에 공감하나 치안력 약화 등 우려도 있는 만큼 전면도입 시기와 방법은 검토가 필요하며, 경찰노조는 국민우려 등을 고려해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2017 국제농업박람회



생명, 땅, 전남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2017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전라남도

17. 10. 26. ~ 11. 5.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라남도



2017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소희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중소벤처기업부  NH농협  광주광역시  나주시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공동주관 :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아이쿱(ICOOP)생협, (사)광주·전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전남농촌진흥청유망마을협의회